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날 짜 2017. 01. 11. (총 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2.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현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 「공직선거법」 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 「집회와 시위에관한법률」 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 「상법」 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 「국민소송법」 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4.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 「집단소송법」 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법인세 제 정상화를 위한 ⑤ 「법인세법」 등 개정, 감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 「검찰청법」 개정을 제시했다.
5.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6.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와 순서

▣ 붙임 2 :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 붙임 3 :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 별첨 1 :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와 순서

<기자회견 개요와 순서>

<개요>

- 제목 :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 일시 장소 : 2017년 1월 11일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순서>

1. 기자회견문 낭독
2. 촛불 7대 입법과제 소개
3. 민생 6대 입법과제와 4대 정책과제 소개
4. 마무리 인사말
5. 질의응답

* 진행순서나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붙임 2 :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등 개정
- 입법과제6. 감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 붙임 3 :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판,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